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2. 건명 :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 동의안
3. 안건요지 : 별첨참조
4. 검토의견 : 별첨참조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안문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추진 의무부담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조례안은 2007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하수처리구역내 매설된 하수관거의 노후 및 침하 등으로 지하수와 방류하천의 오염요인이 되고 있고 계곡수 등 불명수가 하수관으로 유입되어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저하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수질목표(금강합류점 BOD 5.9 mg/ℓ) 달성을 위해서는 하수관거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8,751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의 재정형편상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이 국비 보조금을 30% 지원하고 있고, '06년도 사업으로 서구 월평, 유성구 봉명, 대덕구 회덕 및 오정천 주변지역과 계곡수 유입지점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 동일한 방식으로 '08년에 동구 및 중구지역 5개 하수분구에 대한 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07. 7. 30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우리시가 대상지역으로 통보되었기,

-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정비를 위해 자체부담금(70%)을 20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의거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부의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량 (km)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계			106,300	○ 동 구 - 대전천 우안 : 106ha, 5.9km - 대동천 하류 : 305ha, 19.9km - 가양천 상류 : 730ha, 30.1km
설 계 비		1식	2,360	
감 리 비		1식	1,306	
기타부대비		1식	2,373	
공 사 비	소 계	122.0	100,261	○ 중 구 - 대전천 좌안 : 609ha, 10.5km - 유등천 우안 : 1,200ha, 55.6km
	신설 (km)	58.8	30,695	
	교체 (km)	63.2	51,204	
	배수설비(개소)	8,930	18,362	

□ 의무부담내용

1. 의무부담액 : 206,600백만원(국비 30%, 지방비 70%)

가. 사업비는 106,300백만원, 부가세 제외, 추정금액으로 실시계획
확정시 변동 예정

나. 의무부담액은 정부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가감조정(정부지급금 산정·지급방법 - 붙임 참조)

- 시설임대료 : 185,354백만원, 20년 균등상환

- 운 영 비 : 21,246백만원(20년간 운영), 사업지역 전체 관리

2. 선 부담자 : 사업시행자(민간 투자자)
3. 의무부담자 : 주무관청(대전광역시)
4. 상 환 방 법 : 시설준공 후 20년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에 플러스 수익률
5. 자금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의무부담액	국 비(30%)	지방비(70%)
	206,600	61,980	144,620

※의무부담 사업비 총액에 따라 자금계획 변동될 수 있음.

3.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관련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정비를 위해 20년 상환의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임대형민자사업(BTL사업)으로 시행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 122km의 사업량에, 사업비는 1,063억원이고
- 의무부담액은 2,066억원으로 국비 30%, 시비70%이며,
- 선 부담자는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자이며,
- 의무부담자는 주무관청인 대전광역시임.
-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수준에 플러스 수익률이며,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하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금액으로 하며, 정부지급금의 지급 시기는 매분기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는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임.

본 동의안 검토결과

하수처리구역내 매설된 하수관거의 노후 및 침하 등으로 하수처리장의 효율이 저하되어 2002년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 하수관거종합정비계획에 의거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법률」 제정(2002. 1. 14)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광역시·도 경계지점(금강수계구간 및 유역) 목표수질 고시(2002. 11. 30)와 2006년 7월 6일 시행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대전광역시 갑천 금강 접점 목표수질 BOD 8ppm을 → 5.9ppm 달성과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 10ppm을 → 6.0ppm 으로 2010년까지 맞추기 위해 총사업비 8,75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시책사업인 임대형민자사업(BTL사업)방식을 도입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1차 사업인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의무 부담 동의는 2005년 12월 12일에 5개 처리구역에 총 233.2km 사업량으로 1,401억원을 들여 추진하도록 동의한바 있으며,

제2차 사업인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BTL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본 투자방식이 도입된 것은 2005년도로서 '05년도 17개, '06년도 29개, '07년 15개 시·군 등 현재까지 전국 61개 자치단체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에는 인천, 광주, 울산, 대전 등 4개 광역시와 10개 시·군에서 동 방식의 사업을 추진코자 환경부의 한도금액 승인을 받아 준비 중으로,

본 투자방식의 의무부담비율은 국비30%, 시비 70%로 재정 지원사업 시행시의 평균 지원액 20%보다 10%가 증액되어 100억원 정도의 국비지원을 더 받고, 장기간에 걸친 분산 상환으로 채무부담완화, 물가상승을 감안시 실질적 사업비 감소 효과,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하수관거정비부분의 오염부하량 삭감목표 달성 등의 효과가 기대됨.

그러나, 사업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가 전액 의무부담을 지며, 이자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수준이 현재 5%대 임에도 플러스 수익률을 지급한다는 점.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현재도 매년 평균 150억원 정도의 채무상환을 하고 있는데 본 사업 시행 시는 매년 100억원 이상의 채무상환액이 증가하는 등 상환대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